
정책참고자료

2019-18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강원도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4
- 행안부, 제24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2 국민권익위원회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10
-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금지, 유치원장 교원자격 강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	

3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가치샵시다!”	16
- 광장시장에서 ‘가치샵시다!’ 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 개최-	

4 교육부

학생부종합전형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0
-------------------------------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혈액 검사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가능성 예측	23
- 혈중 특정 단백질 농도와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상관관계 확인 -	

6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과 조직위, 개최도시 중심 평창올림픽 유공자 포상	27
- 9. 27.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 -	

7 농림축산식품부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 이동 차단	30
---	----

8 환경부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37
---	----

9 고용노동부

지역주도! 성과중심! 2020년 지역 고용정책 방향 논의 _____ 42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 종합워크숍」 개최 -

10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로 찾아갑니다 _____ 50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특별 실시 -

11 국토교통부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 ... 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_____ 54

- 운전자에게 보행자도로작업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 ... 27일 시범운영 -

12 해양수산부

일자리의 바다,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열린다 _____ 56

- 9. 26.(목)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104개 해양수산 기업·기관 참여 -

강원도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정보통신 우수사례 대통령상 수상

- 행안부, 제24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경상북도 경주에서 9월 23일(월)부터 양일간 개최한 「제24회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강원도의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과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 ▲대구광역시의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은 국무총리상을 ▲경상북도 경주시의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조성'을 비롯한 6개 사례는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붙임1> 발표대회 시상내역 참조

□ 이 대회는 지자체간 정보통신 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 정보화 수준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과 함께 매년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고 있다. 1996년 시작돼 24회째를 맞았다.

□ 올해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된 31건의 우수사례 중 서면 심의를 통해 8건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행사당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

- 현장에서 발표되지 못했지만 아이디어가 우수했던 4개 사례는 한국 정보화진흥원장상이 수여됐다.
- 대통령상을 수상한 강원도의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사례는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유관기관 약 1만여 대에 달하는 CCTV와 재난·환경분야 등의 공공데이터를 통합해 112·119 신고나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운영비 절감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강원도청 이동현 주무관은 “서비스 향상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 향상에 도움이 돼 보람을 느껴왔는데 이렇게 큰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날 행사에서는 심진홍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장의 특별강연과 함께 26개 ICT업체의 첨단 정보통신장비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각 지역의 정보통신 공무원들이 함께하며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대회에서 소개된 다양한 정보통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주민서비스 혁신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1**제24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심사결과**

○ 대통령상 1, 국무총리상 1, 장관상 6, NIA원장상 4

기관명	발표자	발표사례	수상결과
부산 진구	변가영	공공와이파이 플랫폼 활용 수익모델 시범서비스	장관상
대구시	고호석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	국무총리상
경기 구리시	오영운	IT 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추진	장관상
강원도	이동현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대통령상
전남 여수시	김성열	AI 기반 국민체감형 로봇서비스	장관상
경북 경주시	손종철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조성	장관상
경남 남해군	곽성업	해양쓰레기 오투오 처리시스템 구축	장관상
제주도	고기봉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 호출서비스	장관상
부산 금정구	김재훈	CCTV영상 모바일 관제 시스템	NIA원장상
광주 소방본부	신두석	효율적인 소방용수 관리를 위한 소화전관리시스템 개발	NIA원장상
경기 파주시	김종환	SDN 기반의 행정정보통신망 구축	NIA원장상
충남 보령시	전광배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	NIA원장상

□ 추진 목적

- 지자체 정보통신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분야별 수범사례를 발표하고 우수발표자에 대한 시상으로 업무향상 동기부여
-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의 새로운 기술과 최신 동향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제공과 지방자치단체간 소통의 장 마련

* '96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순회 개최('18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개최)

□ 대회 개요

- (개최 기간) : '19. 9. 23(월) ~ 9. 24(화)(1박 2일)
- (개최 장소) : 경상북도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3층 대회의실)
- (주최/주관) : 행정안전부/경상북도, 한국정보화진흥원
- (참석 대상) : 400여명(행안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정보통신담당공무원 1명이상 참석

□ 주요 내용

- 지방정보통신분야 수범사례 발표 및 우수발표자 시상(12명)

구 분	훈 격	인원	상금
최우수상	대 통 령 상	1명	50만원
우 수 상	국 무 총 리 상	1명	30만원
장 려 상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상	6명	20만원
특 별 상	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4명	10만원

- 업무관련 기술 특강

- AI 기반의 차세대 보안관계 체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경과 및 향후계획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

- 정보통신 장비 전시회 개최(26개 업체 36개 부스)

① 대중교통 교통약자 대기호출서비스(제주특별자치도)

- 운전기사가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노인, 아동 등)의 탑승의사를 알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빈번 발생하여 버스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버스정보안내기를 도입하여 교통약자가 대기신호를 버스기사에게 호출할 수 있도록 하여 버스 탑승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② AI 기반 국민체감형 로봇 서비스(전남 여수시)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환경/복지에 연계하여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말하는 안내로봇”, “재활용 자원 회수로봇”, “독거 어르신 도우미 로봇” 등을 여수시에 도입하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③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강원도)

- 지자체 단위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제약으로 실시간 공유가 안되어 시군 및 유관기관 CCTV(약1만여대), 재난·환경분야 등 공공데이터의 통합·연계를 통해 112·119·재난시 즉각적인 대응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지원한 사례

④ 해양쓰레기 오투오 처리시스템 구축(경남 남해군)

-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 시 인근 하동 섬진강과 사천 남강하구에서 대량의 육지 쓰레기 유입되어 어로행위에 지장을 받고 있어 실시간 해양 감시를 위해 CCTV 설치와 종합적인 상황분석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해양쓰레기에 대한 신속한 상황대처로 주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사례

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행정업무 개선(대구광역시)

- 상수도 수용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검침업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요금고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격검침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계층 라이프케어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

⑥ IT 공유경제!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추진(경기도 구리시)

- 공공시설마다 개별적으로 전자팩스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에는 과도한 예산 소요되기에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분야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 보조단체 및 사회적기업, 영세사업장에 무료로 이용토록 하여 주민서비스를 개선한 사례

⑦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콘텐츠 조성(경북 경주시)

- 기존의 관광정보 안내(안내판, 키오스크, QR코드, 어플 등)서비스 이용자 저조하며 재난발생 시 재난정보 및 대처방안 안내 미흡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사례

⑧ 공공와이파이플랫폼 활용 수익모델 시범서비스(부산시 부산진구)

- 현재 정부,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공공와이파이는 약 30만개소로 회선료 등의 운영비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에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이용한 수익 모델 발굴로 재정부담 완화에 기여한 사례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동일학교 근무 금지,
유치원장 교원자격 강화,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 -

□ 내년부터 국·공립 고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고 유치원 원장의 경우 한층 강화된 교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오전 10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제4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이번 협의회는 과제별 소관부처 담당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생활적폐 개선 추진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 결과, 생애주기별 9개 생활적폐 개선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현행 생활적폐 개선과제

생애주기별	과제명	소관부처
유아·청소년기 (출발선의 불평등)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부
청년기 (우월적 지위 남용)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성년기 (권력유착, 사익편취)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 지역 토착비리 개선 ▶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탈세행위 근절 ▶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보험수급비리 근절 ▶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 안전분야 부패근절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세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 지난 3분기 중 과제별 추진실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아·청소년기의 ‘출발선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시·도교육청의 「중등인사관리원칙」 또는 「전보계획」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학생평가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따라서 앞으로 국·공립 고교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으며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학생평가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한층 강화하였다.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의 폐쇄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폐원시기의 적절성, 유아지원 계획의 적절성, 학부모의 의견, 그 밖에 유아의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또한, 개정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요건도 상향된다.

중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면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거나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했던 것을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 청년기의 ‘우월적 지위남용’ 근절대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7월 기타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워크숍’을 개최해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블라인드 채용 확대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공공기관 채용 관련 정부시책을 전달했다.

또 9월부터 10월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비리가 적발된 기관, 채용비리가 많이 발생한 직역, 전수조사 후속조치가 미흡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에서 나온 비리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분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근로3법」 개정 등 관계규범 정비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올해 8월 ‘카카오톡 연계 익명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며 문화예술계, 체육계, 의료계, 교육계 등 분야별 갑질행위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자체가 주관하는 시·도별 갑질 근절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사회적 인식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권력유착·사익편취’ 근절을 위한 대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우선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8월

「의료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료법인의 임원지위 매매가 금지되고 임원 정수는 물론 결격사유와 특수관계자 비율이 제한돼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밀접한 재건축·재개발비리 근절 방안도 정기 국회와 맞물려 많은 성과가 예상된다.

올해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데 이어 ▲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개별홍보를 할 경우 해당 입찰결과를 무효 ▲ 시공사가 3회 이상 수주비리를 저지를 경우 정비사업에서 해당 업체를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 특히, 이번 협의회는 경기·경북·전남 등 3개 지자체가 참여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적폐 개선사례를 공유했다.

○ 경기도는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추진현황’이라는 주제로 ‘경기 의료원 CCTV 설치’ 등 3개 사항을, 경상북도는 ‘부당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7개 사항을, 전라남도는 ‘건설 분야 투명성 및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각각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회의에서 지자체가 논의한 내용과 건의사항 등을 해당 부처에 전달해 개선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진리 부위원장은 “정부는 협의회 간사기관인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협의회 참여 주체를 다변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생활속 반칙과 특권’의 정의

-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특혜로 인하여 국민에게 상실감·박탈감을 주어 온 생활 속 반칙과 특권

- (과제) 유치원비리, 학사비리, 채용비리 등 생애주기별 9개 과제

< 생애주기별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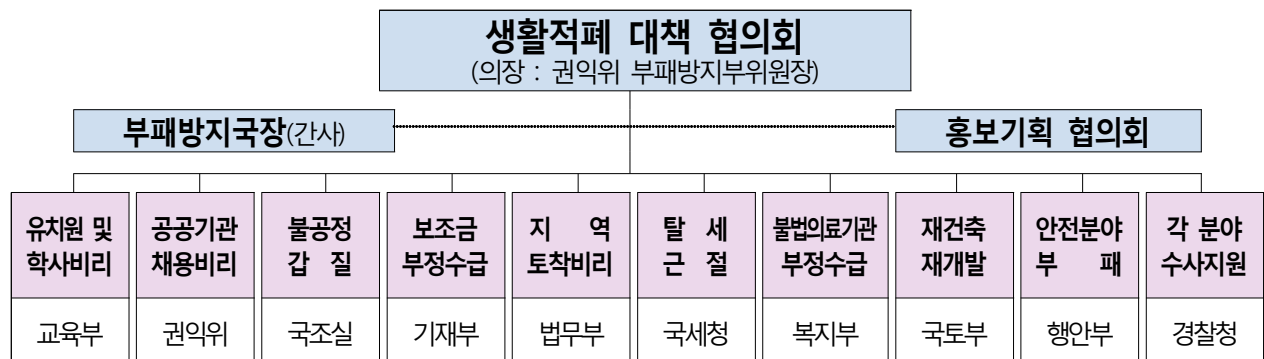
유아·청소년기	청 년 기	성 년 기
✓ 출발선의 불평등	✓ 우월적 지위 남용	✓ 권력유착 ✓ 사익편취
▶ 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강화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 공공분야 갑질 근절	▶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개선 ▶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 ▶ 지역 토착비리 근절 ▶ 안전분야 부패방지 ▶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 ▶ 탈세행위 근절

□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추진체계 및 운영방식

- 개선과제의 설정 및 이행관리, 부처간 조정·협의 등을 수행하는 범 정부 추진체계로서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구성·운영

- 권익위가 사무처 역할을 수행하고, 과제 소관기관 국장급 참여

-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추진성과 홍보 추진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과 장 조덕진 ☎ 044-205-1340 사무관 이종윤 ☎ 044-205-134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 과 장 김상년 ☎ 044-200-7611 팀 장 박홍상 ☎ 044-200-7296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 과 장 엄진섭 ☎ 044-203-6231 사무관 김상훈 ☎ 044-203-6181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과 장 최영진 ☎ 02-3703-2011 사무관 신정욱 ☎ 02-3703-2081
기획재정부	재정성과평가과 과 장 하승완 ☎ 044-215-5370 사무관 김영웅 ☎ 044-215-5371
법무부	형사기획과 과 장 김창진 ☎ 02-2110-3269 검 사 한지혁 ☎ 02-2110-3550
국세청	조사기획과 과 장 윤승출 ☎ 044-204-3501 사무관 이태연 ☎ 044-204-3522
조세심판원	행정실 실 장 이기태 ☎ 044-200-1710 사무관 이종철 ☎ 044-200-173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오창현 ☎ 044-202-2470 서기관 신현두 ☎ 044-202-2473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과 장 이재평 ☎ 044-201-3383 서기관 박진호 ☎ 044-201-3384

전통시장 · 소상공인과 함께, “우리 가치샵시다!”

- 광장시장에서 ‘가치샵시다!’ 문화 확산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전통시장 가을축제¹가 시작되는 9월 20일(금) 광장시장에서 ‘가치샵시다!’²라는 슬로건으로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개최했다.

1」 (기간) '19. 9. 20 ~ 10.20, (참여시장)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370여곳

* 참여시장별 행사일, 행사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시장애(www.sijangae.or.kr)에서 확인 가능

2」 가치(value) - 같이(together), 사다(buy) - 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전통시장에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구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

행사가 개최된 광장시장(서울 종로구 소재)은 110여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초의 상설시장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순수 조선 상인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명맥을 지킨 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치샵시다!’ 문화 확산 캠페인과 함께 장보기, 경품 행사 등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다.

특히, 경품행사에서는 지난 9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순방 때 런칭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혁신 중소기업의 ‘브랜드 K’ 제품 등이

경품*으로 지급돼 시장 내 고객 유입에 한 몫을 담당했다.

* (브랜드 K 제품 경품) 에브리봇(주) 물걸레청소기, 자이글(주) 롤링쿱스, (주)휴비딕 비접촉식 체온계, 제이엠그린 더블 세이프 도마, 우리아이친환경(주) 니콜페이퍼 등 5개 제품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유튜브에 약 11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1인 크리에이터인 SOF(본명 박준하)가 함께하며 상생협력, 가업승계·재기 청년상인 등의 점포를 찾아 전통시장 홍보도 병행됐다.

박영선 장관은 “‘가치삼시다!’ 캠페인이 전 국민 문화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의 애용과 함께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개최되는 ‘전통시장 가을축제’ 기간에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에 많이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영선 장관은 광장시장 행사 이후 신중부시장을 찾아 특판전과 1인 미디어 오픈 스튜디오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과 크리에이터들을 격려했다.

□ 개 요

○ (일시) ‘19. 9. 20(금), 11:30 ~ 13:30

○ (장소) 광장시장* 일원

* (장소 선정 의미) 110여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초 상설시장으로 일제 강점기 시절 순수 조선 상인들의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명맥을 지킨 곳

□ (행사 슬로건) 가치샵시다!

* 가치(value) - 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

*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작지만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여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



□ (주요 내용)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 공동마케팅 행사, 확산 홍보

○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 및 공동마케팅 행사 운영

* 장보기 등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 1인 크리에이터 활용 전통시장 홍보, 경품행사 등

○ ‘가치샵시다!’ 문화 확산 홍보

* 캠페인(10분 이내) 및 홍보(40초 이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유튜브, SNS,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대국민 문화로 확산

□ 시간 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 11:30		■ 행사장 도착	■ 광장시장 북2문
11:30 ~ 13:00	(90 분)	■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 * 장보기 행사 병행	■ 현장소통, 장보기, 오찬 등 * 일부 일정 크리에이터 참여
13:00 ~ 13:30	(30 분)	■ 공동마케팅 행사	■ 광장시장 서문

구분	점포명 (대표자명)	점포특징	점포사진
현장소통	순희네 빈대떡 (추정애)	■ 박가네와 함께 광장시장 최고의 명물 ■ 이마트, 롯데푸드와 상생을 통한 대기업 유통망 진출 ※ 순희네 빈대떡 노점(점포이전에 장사하던 장소)에서 촬영	
현장소통 + 장보기	홍림 반찬가게 (임덕진)	■ 광장시장에서 3대째 운영 중인 반찬가게 ■ 넷플릭스 '길 위의 셰프들' 방송 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음	
현장소통 + 장보기	광장총각강정 (김대운)	■ 다양한 사업실패 후 수제강정으로 성공 ■ 6명의 청년들이 '강정어벤저스'라는 독특한 컨셉으로 성공몰이	
현장소통 + 장보기	광진과일 (김윤홍)	■ 50년 전통의 광장시장 대표 과일가게 ■ 최고급 과일 취급이 전통 유지 비결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진출	
현장소통 + 오찬	성우육회 (남정우·박상우)	■ 39년전 광장시장에서 이불가게를 시작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육회집 운영 * 이불가게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먹거리로 사업 전환 ■ 두명의 청년(이종사촌)이 운영하고 깨끗한 점포 분위기로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	
현장소통	복주머니 (나덕윤)	■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기념품점 ■ 미국인이 행운의 2달러와 응원 메시지를 남긴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메시지 부착 릴레이가 지속되고 있음	

학생부종합전형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 ◆ 학종 실태조사를 위해 입시전문가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조사단’ 운영
- ◆ 학종 비율 및 특목고·자율고 등 선발 비율이 높은 대학 13개교 실태조사
- ◆ 학종 등 입시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 신설
- ◆ 종합감사 미수감 16개교 중 10월 홍익대학교 종합감사 실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월 26일(목)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포함한 입시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 실태조사는 학종 비율과 특목고·자율고 등 학생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종합감사 3개교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실태조사 대상 13개교(종합감사 3개교 포함) : 건국대, 광운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 이를 통해, 학종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올해 11월 중 발표 예정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하여 교육부, 대학 및 교육청 담당자, 외부 전문가, 시민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을 구성 운영한다.

○ ‘학생부종합전형 조사단’은 10월 말까지 입시자료에 대한 조사, 분석 등을 완료하고, 조사 결과는 조사 완료 즉시 발표할 계획이다

○ 또한, 9월 26일(목) 교육부 누리집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하여, 학종 등 입시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하여 집중 신고를 받는다.

* 교육부 누리집 → 국민참여민원 → 신고·제안·고충처리 →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국민신고 센터 → 대학 입시비리신고

□ 조사 과정에서 대입 기본사항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거나,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통해 충분한 비위 정황이 접수 된 경우에는 사안을 판단하여 즉시 특별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 특별감사단은 교육부, 감사원 등 범부처 종합감사단으로 운영되며, 입시전문가, 시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인력이 함께 투입된다.

□ 먼저 발표(‘19년 6월)한대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주요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 10월 14일(월)부터 2주 간 지난 해 적립금 특정감사에서 교비회계 운영의 적정성 등이 문제된 홍익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 학종 등 입시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하는 한편, 법인, 인사·채용, 학사,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종에서 비교과영역 미반영 여부 등 대입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은 학부모의 경제력과 지위가 자녀의 입시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사회적 불신이 큰 만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 “교육부는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혈액 검사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치매 가능성 예측

- 혈중 특정 단백질 농도와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상관관계 확인 -

- 서울대학교 목인희·황대희 교수와 고려대학교 이상원 교수 연구팀이 경도인지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는 환자를 선별해 내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 이번 연구 결과는 뇌과학 분야 국제적 학술지인 *Progress in Neurobiology* (IF=10.658) 에 9월 30일 게재되었다.
 - ※ 논문명: Prognostic plasma protein panel for A β deposition in the brain in Alzheimer's disease
 - ※ 저자 : 박종찬(서울대, 제1저자), 한선호(서울대, 제1저자), 이한겨레(고려대, 제1저자), 정효빈 (EMBL, 제1저자), 변민수 (서울대병원, 제1저자), 황대희(서울대, 교신저자), 이상원(고려대, 교신저자), 목인희(서울대, 교신저자) 포함 총 14명
-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치매 질환으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의 축적으로 인해 뇌세포가 손상되어 병의 악화가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
- 특히, 기억력에 이상을 호소하는 경도 인지장애 환자군 중 50%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되는데, 뇌세포 손상이 진행된 이후 발견되면 근본적 치료가 어려우므로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하지만, 현재 의료기술로는 아밀로이드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라는 고가의 뇌 영상 촬영 이외에는 경도 인지장애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간편한 진단기술의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연구진은 혈중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뇌 속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단백질체학을 기반으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의 정도에 따라 변화하는 혈액 내 후보 단백질을 발견하였다.

○ 효소 면역 측정법을 통해 후보 단백질 중 최종 4가지 바이오마커 물질*을 확인하고, 복합 단백질마커 패널을 제작하여 경도 인지장애 환자군의 혈액 내 4가지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LGALS3BP, ACE, Periostin, CDH5

○ 측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들의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여부를 예측해 보고, PET 데이터와 대조해 본 결과 예측 정확도가 83.6%로 나타났다.

* 107명의 실험자 대상, 정확도 83.6%, 민감도 68%, 특이도 90.2%)

□ 묵인희 교수는 “연구결과가 실용화되면 간단한 혈액검사로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치매로의 진행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조기 치료를 통한 치매 예방 및 진행억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 “향후 기술 보완을 통해 예측 정확도를 9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말했다.

□ 이번 연구는 과기정통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참고자료> 1. 연구결과 개요

1 연구배경

-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치매 원인질환으로 만성적인 진행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뇌 세포가 손상되기 이전에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 뇌 세포가 손상되기 이전부터 뇌 속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 가는데, 이를 예측하는 것은 알츠하이머병 조기진단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의 경우 약간의 인지기능의 이상을 호소하지만, 이 환자군이 치매로 진행이 될지는 뇌 영상을 찍어보지 않고서는 현 의료기술로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 본 연구는 알츠하이머병 유발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뇌 축적을 혈액을 통하여 예측하고자 하였다. 혈중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들이 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매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단백질체학 기반으로 발견한 후보물질을 재검증하여 혈중 존재하는 단백질들의 바이오 마커 패널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 본 연구팀은 혈중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이 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과 매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총 254명의 실험자가 참여하였다 (인지기능 정상군 107명, 경도인지장애군 107명, 알츠하이머성 치매군 40명).
- 본 연구진은 단백질체학 기반으로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된 혈액 내 후보 단백질들을 발견하였다. 후보 단백질들에 대한 효소 면역 측정법 기반 검증 실험 결과, 혈중 단백질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과 연관되어 있고, 이를 통해 경도 인지장애 환자군의 치매로의 진행여부를 예측 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혈중 복합 바이오마커 패널은 뇌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양과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또한 뇌 안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 유무에 따라 베타-아밀로이드 양성군과 음성군으로 구분하였을 때 두군 사이에 혈중 단백질이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복합 바이오마커 패널을 구축하였을 시 정확도 83.6%로 경도인지장애군 내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군을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뿐만 아니라 본 연구진은, 또다른 혈중 복합 단백질 마커 패널을 가지고 인지기능과 관계없는 전체 환자군에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예측하는 방법도 개발하였다. 이는 정확도 87.1%로 뇌속 베타-아밀로이드 축적군을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기대효과

- 이번 연구를 통해 발굴된 뇌 베타-아밀로이드 예측 혈액 복합 바이오마커 패널은 경도 인지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치매로 진행이 될 지의 여부를 예측해 줄 수 있으므로,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발병 예측 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며,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방 및 진행억제 효과를 높이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알츠하이머병 뇌 병리를 발견하려면 일부 대학병원에서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PET 영상장비가 필요하지만 혈액 바이오마커 통해 뇌 병리를 예측함으로써 검사 접근성 향상 및 검사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혈액 검사를 통한 알츠하이머병 병리 예측은 진단 뿐만 아니라 최근 알츠하이머병 신약 임상시험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치매 이전 단계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는 데도 상당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과 조직위, 개최도시 중심 평창올림픽 유공자 포상

- 9. 27. 2018 평창동계올림픽 · 패럴림픽 유공자 포상 전수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9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훈장 120명, 포장 131명, 대통령표창 262점, 국무총리표창 493점 등 총 1,006점

포상 규모는 ▲ 훈장 120명, ▲ 포장 131명(근정포장 61명, 체육포장 70명), ▲ 대통령표창 262점(개인 172명, 단체 90개 기관), ▲ 국무총리표창 493점(개인 440명, 단체 53개 기관) 등, 총 1,006점이다.

훈격별 수훈자는 ▲ 훈장 1등급 2명(체육훈장 청룡장), ▲ 2등급 8명(체육훈장 맹호장), ▲ 3등급 19명(홍조근정 5명, 체육훈장 거상장 14명), ▲ 4등급 31명(녹조근정 19명, 보국훈장 삼일장 1명, 체육훈장 백마장 11명), ▲ 5등급 60명(옥조근정 22명, 보국훈장 광복장 1명, 체육훈장 기린장 37명)이다.

추천 기관별로는 ▲ 조직위 475점, ▲ 강원도 304점, ▲ 군·경·소방 87점, ▲ 중앙부처 127점, ▲ 지자체(강원도 제외) 13명 등이다.

문체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부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와 강원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이후 ▲ 다른 국제대회 개최 유공 대비 민간인 및 민간 단체 비중 확대(70%), ▲ 조직위와 개최도시(강원도) 추천 임직원 및 민간인

대폭 반영(78%), ▲ 긴급 상황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한 군·경·소방 종사자 우대(7.6%) 등의 포상 기본 방향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 후보자의 연령, 해당 공적, 수공 기간, 기존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해 포상 규모와 후보자의 훈격 등을 최종 결정했다.

수호랑과 반다비 디자이너, 한국체육기자연맹 회장, 홍보 유공자 등 수훈

전수식에서는 ▲ 평창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를 디자인한 이희곤 매스씨엔지 대표가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는다. ▲ 세계체육기자연맹 집행위원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 사진전을 개최한 한국체육기자연맹 정희돈 회장과, ▲ 김연아 선수의 소속사 대표로서 올림픽 홍보에 기여한 (주)올댓스포츠 구동희 대표 등은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훈한다. 이밖에 140여 개인 및 단체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다.

아울러 이번 포상에서 수용하지 못한 자원봉사 유공자에게는 문체부장관 표창을 별도로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25일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평창올림픽 성공에 기여한 공로로 ▲ 훈장 1등급-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이명호 대한장애인체육회장 등 2명, ▲ 훈장 2등급-송승환 올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이문태 패럴림픽 개폐회식 총감독, 여형구 전 조직위 사무총장 등 5명, ▲ 훈장 3등급-배동현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 성백유 전 조직위 대변인, 고창영 전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 등 14명 등, 총 21명에게 훈장을 직접 수여한 바 있다.

붙임 1. 2018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공자 포상 개요

□ 포상 개요

- (대상)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의 개최를 위해 대회의 준비 · 운영에 참여한 개인(민간인·공무원), 단체

* '18년 3월 18일(패럴림픽 폐막식) 이전까지의 공적으로 평가

○ (방향)

- (민간확대) 민간 포상 확대 방침에 맞추어 민간인 포상비율 확대(70%)

* 민간 : 공무원 비율 - 월드컵(34:66), '14인천AG(64:36), '15광주U대회(61:39)

- (조직위개최도시 중심) 조직위강원도가 추천한 공무원·민간인·단체에 78% 배정

- (수혜자 확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림픽 유치 유공 및 기 포상자는 행안부의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의 기준에 맞추어 추천 제외

* 훈·포장은 개인 일생 공적에 대한 평가 성격으로 단기간 훈·포장 중복 지양

- (자원봉사단체 중심) 자원봉사자 개인은 대부분 단기공적(1~2개월)이고, 자원봉사인력(약 15천여명) 대비 포상 규모 한계 → 금번 포상은 자원봉사 단체 중심으로 포상(행안부 추천 단체 등), 자원봉사자 개인은 별도포상(장관표창) 추진

- (군경소방공무원 우대) 긴급 상황 자원 및 테러 경계 등에 기여한 공로로 약 7.6% 배정

* 노로바이러스 발병으로 민간보안요원 근무 불가능시 보안업무 대체, 폭설시 대회시설 제설 지원, 대회 전 및 대회 기간 중 개최도시지역 외곽 경계, 치안 교통통제 지원 및 소방 지원

< 기관별 포상 규모 배정 >

대 상	합 계			조직위 추천 (475, 47.2%)			중앙부처 추천 (214, 21.3%)			지자체 추천 (317, 31.5%)*	
	공무원	민간	합계	공무원	전문직	민간	공무원	군경소방	민간	공무원	민간
인원수(명)	304	702	1,006	103	177	195	40	76	98	85	232
비율(%)	30	70	100	10.2	17.6	19.4	4.0	7.6	9.7	8.4	23.1

* 강원도(304), 울산(3), 경기(1), 서울(2), 인천(2), 세종(2) 등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 이동 차단

1. ASF 발생 상황 및 조치사항

-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양성으로 최종 확진(9.23, 9.24)되었고, 강화군 예찰 검사에서도 ASF가 의심되어 최종 확인 중에 있다.
- 이에 따라 오늘 오후 4시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ASF 발생 상황과 방역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 이 회의에서 총리께서는 현 발생상황과 신고 상황을 볼 때 그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질책 하시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하였다.
 -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존 틀과 매뉴얼을 뛰어넘는 방역 틀을 가져갈 것을 지시하였다.
 - 방역에 정부,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모두 총력 대응해야 하며, 축산농가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농식품부는 금일 12시부터 전국의 전체 돼지농장, 출입차량, 사료공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고, 이후 상황을 감안하여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

- 또한, 경기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한 중점관리지역을 경기도, 강원도 및 인천시로 확대한다.
- 최근 ASF가 발생한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한다.

2. 4대 권역 지정 및 방역관리 강화

- 먼저, 중점관리지역은 현재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에서 경기도·인천시·강원도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다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3주간 돼지와 가축 분뇨의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한다.
- 중점관리지역을 경기 북부(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등 10개 시·군), 강원 북부(화천·양구·인제·고성 등 4개 시·군), 경기 남부(나머지 20개 시·군), 강원 남부(나머지 13개 시·군) 등 4대 권역으로 구분한다.
- 중점관리지역은 돼지와 가축 분뇨의 이동 및 반출이 권역 내부에서만 가능하며, 다른 권역으로 이동 및 반출이 제한한다.
- * 4대 권역 밖에서 권역 안으로도 돼지와 분뇨의 이동 금지
- 또한 권역 내에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검사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한다.

- 이를 위해 민간 임상수의사(4대 권역 내) 동원령을 발령하여 임상검사를 지원한다.

○ 도축 과정에서 도축 검사를 거치고 유통되기 때문에 도축된 돼지고기는 다른 권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 접경지역의 집중적인 방역을 위해 민통선을 포함하여 접경지역 14개 시군의 주변 하천과 도로 등을 대상으로 중점관리지역 해제 시까지 집중 소독한다.

○ 이를 위해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군(軍) 제독차, 보건소 연무소독차, 드론 등 62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 주요 수계 : 임진강(시미천·만우천·문산천), 한탄강(영평천·대교천), 북한강(가평천·화악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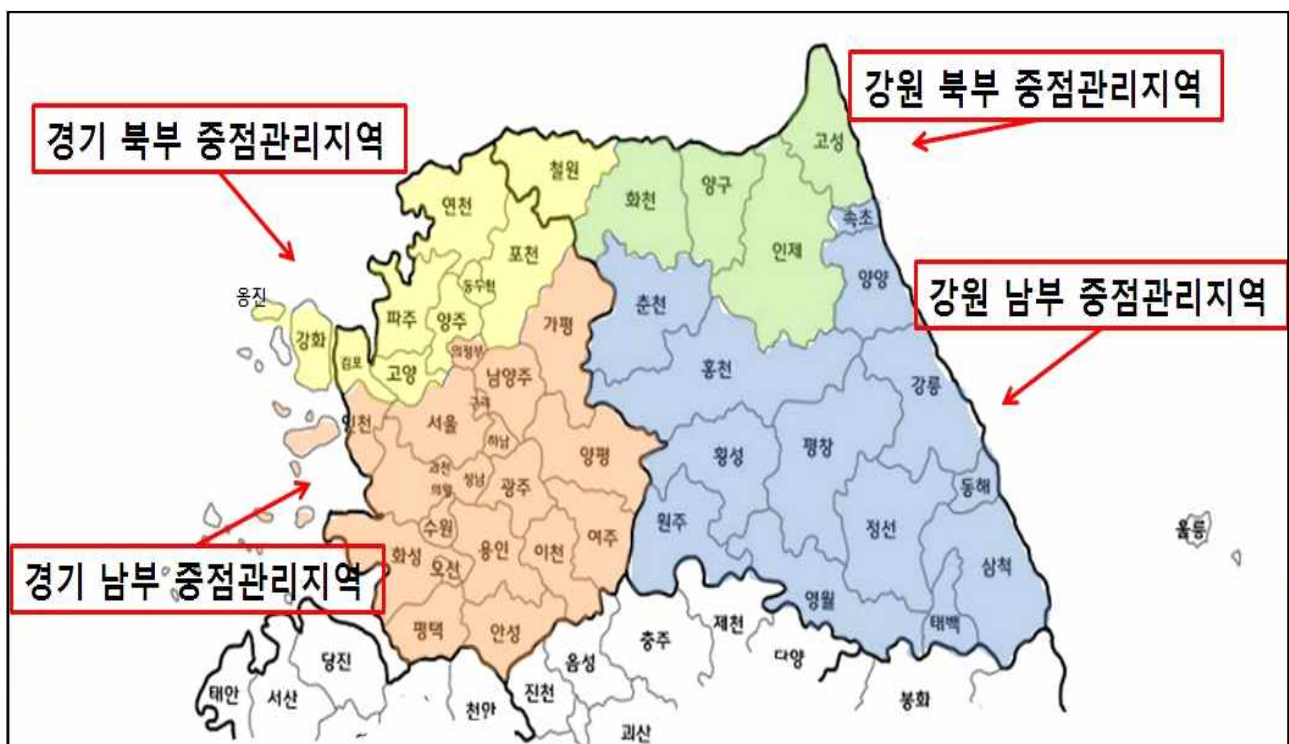
□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만 24시간 운영 중이었으나, 농장초소에 대해서도 당초 14시간(06~20시)에서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한다.

현재 중점관리지역을 6개 시·군에서 경기·인천·강원 전체로 확대하고,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타 권역과 교차 이동을 차단

1. 경기·인천·강원을 4대 권역으로 구분

① (기본방향) 경기·인천·강원을 4대 권역(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으로 구분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 집중 방역

- ① 경기 북부 :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고양, 김포, 강화, 옹진 + 철원(강원)
- ② 강원 북부 :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③ 경기 남부 : 경기 북부를 제외한 경기도 내 시·군
- ④ 강원 남부 : 강원 북부를 제외한 강원도 내 시·군



② 중점관리지역 주요 방역조치

① (돼지 반출입 금지) 4대 권역 간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3주간)

- (지정도축장) 경기·인천·강원 내 4대 권역은 권역 내 '지정도축장'에서만 도축·출하, 다른 지역으로 반출 금지
- 도축장 출하 시에도 반드시 농장에서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은 후 출하승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허용
 - 임상수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출하돼지 임상검사 등 추진
- * 지정도축장 : 경기북부(김포, 연천, 포천, 철원) / 강원 북부(홍천) / 경기 남부(광주, 남양주, 부천, 안성, 안양, 평택, 화성) / 강원 남부(원주, 평창)
- (가축분뇨) 발생지역 방역대 내 양돈농가는 가축분뇨 반출금지
 - 가축분뇨가 넘칠 경우 FRP 탱크, 톱밥 등을 긴급 지원, 임시보관
 - 제한적 반출의 경우에도 해당 농장 임상관찰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소독 조치를 실시하고, 공동자원화시설 등에서 처리
 - 처리장 이동 시 방역관이 동승하고, 분뇨운송차량 앞·뒤에서 소독차량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이동
- * 공공처리시설 등 : 경기북부 97, 강원북부 5, 경기남부 83, 강원남부 31

② (집중소독) 가용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소독 및 생석회 살포

- 지자체·농협 방제차량(119대), 공동방제단(95), 군 제독차량(32), 광역방제기(9) 등 소독차량 266대 총동원, 해당 지역 집중 소독
- 전국 양돈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하고, 집중 관리지역에는 최대 4

배의 생식회를 공급하여 축사 주변 집중 살포

- * 중점관리지역(경기·강원·인천)은 농가 당 40포(1포당 20kg), 중점관리지역 이 외는 10포 배부(총 87,520포 배부)

③ (축사 출입통제) 인력의 축사 출입 제한 조치

- 3주간 경기·강원지역 축사에 질병치료 목적 이외에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출입 제한(지자체)

④ (농장초소) 모든 양돈농장 입구에 초소를 설치

- 초소에 공무원, 경찰, 군인, 인근주민 등을 배치하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 인력, 차량 출입 철저히 통제

* (9.23 현재) 경기·강원 권역 284개소(중점관리지역 283), 전국 352개소

- (임무) 사람,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 GPS 장착여부, 소독필증, 농가 출입 시 소독 여부 등 확인

2. 접경지역 하천, 주변도로 등 일제 방제

- ☐ (목적) 경기 북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전역의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강, 하천, 도로 등 일제방제 실시

☐ 일제 방제 대상

- 경기·강원 접경지역(민통선 내 포함) 하천, 도로, 철책 등 주변

* 민통선 내 도로, 철책, 하천 등은 지자체와 국방부 간 협의하여 실시

□ 소독차량 배치 · 운영 계획

- (차량동원) 총 62대(국방부 제독차 14, 행안부 연무소독차 14, 지자체 14, 농협드론 포함 20)
- (운영계획) 지자체, 국방부 · 행안부, 농협 협업으로 철저히 소독
 - (주요 하천, 도로) 농협 소독차, 행안부 연막소독차 배치 · 소독
 - * 매일 구간별로 농협소독차 및 연막소독차를 이용하여 총 4회(각 2회×2대)
 - (민통선 내 도로, 철책) 지자체 소독차, 군 제독차 동원 · 소독
 - * 지자체 소독차량 및 군 제독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철책, 하천 등을 소독
- (소독약) ASF 유효소독제 지원(시도가축방역비 및 특별교부금 등 활용)

구분	시·군	소독차량 배치 계획안 (대)					계
		제독차	연막 소독차	지자체 방역차	농 협		
					방역차	드론	
합계	14개 시·군	14	14	14	14	6	62
경기도 (7개 시·군)	소 계	7	7	7	7	5	33
	파주시	1	1	1	1	2	6
	연천군	1	1	1	1	—	4
	포천시	1	1	1	1	3	7
	김포시	1	1	1	1	—	4
	고양시	1	1	1	1	—	4
	양주시	1	1	1	1	—	4
	동두천시	1	1	1	1	—	4
인천시 (2개 시·군)	소계	2	2	2	2	—	8
	강화군	1	1	1	1	—	4
	옹진군	1	1	1	1	—	4
강원도 (5개 시·군)	소계	5	5	5	5	1	21
	철원군	1	1	1	1	1	5
	화천군	1	1	1	1	—	4
	양구군	1	1	1	1	—	4
	인제군	1	1	1	1	—	4
	고성군	1	1	1	1	—	4

※ 주요 수계 : 임진강(사미천, 만우천, 문산천), 한탄강(영평천, 대교천), 북한강(가평천, 화악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사항의 후속조치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 *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자영업자인 농어업인 등은 제외
 -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둘째,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

(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①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②시설·장비 및 인력 구비, ③업무실적이 있을 것, ④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 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 >



□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1 추진배경

- 법률 개정('19.3.26 공포)으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 근로자*가 아니면서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하는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취약계층 범위를 확대
-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2 주요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내용 》

- 연구센터의 지정요건 등 규정(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 (지정요건) ①업무수행에 적합한 사업계획, ②시설·장비 및 인력 구비*, ③업무실적 있을 것, ④재무구조의 건전성 및 재정적 안정성 확보

* 시설·장비 및 인력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위임

 - (지정취소사유) ①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②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 (법률에서 정한 지정취소사유) ①거짓 또는 부정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2호)
 -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에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개정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 ① 연구센터의 시설·장비 및 인력 세부 지정기준 마련(안 제19조의2 및 별표 4 신설)
 - (시설·장비기준) ①실험실, 전산실 또는 사무실, ②대기질 측정장비 1벌, ③채취시료 처리 및 분석 장비 1벌, ④전산장비 1벌

※ 다만, 지정 업무분야의 특성을 고려, ② 또는 ③ 요건은 적용제외 가능

- (인력기준) ①센터장급(기술사 또는 박사 등) 1명 이상, ②연구원급(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4년 이상 종사 등) 2명 이상, ③보조연구원급(학사) 2명 이상

2 연구센터의 지정절차 마련(안 제19조의3 신설)

- 환경부장관이 연구센터 지정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에 공고(20일 이상)하면, 신청자는 지정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의 충족 증명서류, 업무실적 등

-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을 구성·지정여부 결정(시행령 규정사항), 지정된 기관에는 지정서 및 현판 발급

<연구센터 지정절차>



3 연구센터의 지정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19조의4 및 별표 5 신설)

<지정취소 등 세부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거짓·부정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취소	-	-	-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지원비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6개월 이상 업무 수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	-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지정취소	-	-	-

3 기대 효과

- ☐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4 시행일

- ☐ '19.9.27 시행, 다만 취약계층 범위 확대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

□ 취약계층

- 취약계층이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으로(법 제23조),
 - 그 구체적인 범위는 ①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②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함(시행령 제14조)

□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 환경부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

지역주도! 성과중심! 2020년 지역 고용정책 방향 논의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책 종합워크숍」 개최 -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월) 오후 2시, 울산에서 열린 「지역고용정책 종합워크숍」에 참석하여 “지역 주도·성과 중심”의 내년도 지역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 이번 종합워크숍은 지난 9월 3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것으로,

* (주요 내용) 지역 주도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컨설팅 지원 사업 신설(「고용 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및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지역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 (참석대상) 17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복지+센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업무 담당자 및 지역고용전문가 등 약 150명 참석

* (구성) ▲(1부) 지역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설명

▲(2부) 지역 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 및 지역혁신프로젝트 우수사례 공유

▲(3부) 동남권 자동차산업 고용동향 및 일자리 창출 방안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에서 발표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이 재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지역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대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 동 사업은 그 간 중앙정부 주도 지역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 * ▲지역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 부족 ▲단년도 프로그램 사업 위주
 ▲요건 충족 시 지원 (성과에 대한 목표 및 실행가능한 대안제시 미흡)
 ▲재정지원에 치중 ▲중앙-지방간 협업 부족 등

<기존 지역일자리사업과 패키지 지원사업의 차이>

기존 일자리 사업 VS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 ▶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기존 일자리 공모사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기간 단년도 위주 ▶ 2~5년간(중장기)  기존 일자리 공모사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심사 대상 단기 프로그램 사업 계획 ▶ 중장기 지역일자리 종합계획  기존 일자리 공모사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중앙정부 역할 재정지원 ▶ 재정 및 컨설팅 지원  기존 일자리 공모사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 중앙정부는 재정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현장감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지원하는 중앙-지방 협업 사업이다.

○ 이와 관련,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지역고용정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설명」 발표를 통해 위 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 워크숍 등에서 논의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계획을 보완할 예정임을 밝혔다.

- 기본 추진방향은 첫째, 지역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지방 협업 확대”

- 둘째,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일자리 위기가 우려되는 “광역·기초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종합 일자리사업 계획 수립·제안 유도

- 셋째, 지역 노동시장 개선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지역의 성과목표 달성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 아울러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부산시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별 일자리 네트워크*와 지역일자리 우수사례를 전국 지역일자리 유관기관**들과 공유하였다.

* 고용노동부와 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주요 산업별로 구성된 일자리 협의체
(9월 기준 전국 42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70개 네트워크 운영 중)

- 광주시는 ‘광주 가전산업 일자리 네트워크’를 통해 공기가전기업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 AS센터 운영 지원, ‘전자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현장 맞춤형 NCS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 부산시는 부산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조선해양산업과 신발산업 등 부산지역 대표 산업이 당면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 간 협업을 지원하고,
 - 고용위기업종 퇴직자를 대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481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월 3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경제·산업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과 컨설팅을 최대한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추진 배경

- 그간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일자리사업*은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고용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행안부) 등

- 이로 인해 일자리사업 추진 시 노동시장 권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협업이 부족
- 또한, 지역의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된 지역 일자리 종합계획의 부재로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노동시장 대응이 어려움
 - 단편적인 사업 중심의 일자리 공모사업으로는 종합적인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한계
- 지역이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로 경제·산업정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중앙이 지원하고,
 - 위기에 선제대응하는 지역의 종합 일자리사업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일회성사업이 아닌 지속적 지역 노동시장 성과 창출 필요

2 추진 방안

< 기본 방향 >

① 중앙과 지방간 협업 확대

- ▶ 지역이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컨설팅 등 체계적 지원 제공

②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위기 선제대응 종합 일자리사업 계획 지원

- ▶ 지역의 경제·산업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하에 일자리 위기가 우려되는 광역-기초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사업 제안 유도

③ 구체적 일자리 성과 목표 달성

- ▶ 지역 노동시장 개선 효과를 체감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컨설팅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지원

1 지원 대상지역

- (지원대상) 現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적용하여 고용위기 우려와 관련된 정량·정성요건을 충족하는 자치단체
- (우대) 동일 지역 노동시장 권역 내 기초자치단체 간, 광역-기초 자치단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선정 우대

* 광역시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 일자리 권역, 산업정책과의 연계 가능성, 훈련기관·고용서비스 기관 등 지역고용 인프라 등을 감안

2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사업계획 수립) 요건충족 지역은 고용위기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된 종합적인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
- (정책 컨설팅) 「권역별 일자리정책 자문단」을 통해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지원(‘19.下)
 - 패키지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및 혁신프로젝트도 상호 연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권역별 일자리 자문단 구성 및 역할

- (개요)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기초 자치단체와 지역고용 전문가를 매칭시켜주고 정기적 자문단협의회 및 교육 운영, 자문비용 등 지원
- (구성)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 및 자치단체·지방관서 추천을 받아 후보군을 마련, 권역별* 5~10명 내외로 구성
- * 서울권, 경기·강원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경권, 동남권 등 6개 권역

- 해당 지역에 권역별로 구성된 일자리정책 자문단 풀(Pool)* 공유, 전문가-자치단체 매칭

* 지역별 대학·연구기관 등 중심, 자치단체, 고용부 지방관서 등의 추천으로 구성
→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단체의 지명 순위에 따라 1:1 매칭

- 각 지역별 고용정책이 전체 맥락에서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 일자리정책 자문단」 구성·운영

⇒ 자치단체 컨설팅 방향 설정, 사업계획 피드백 등 조정·조율

③ 심사선정 및 성과도출

- (심사·선정) ▲지원의 시급성·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실행가능성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 ▲일자리 창출 목표 등을 중심으로 심사,지원대상 가선정
- (컨설팅) 실효성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계획 컨설팅」 실시(사업수행기관)
- (협약 체결)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 보완된 사업계획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자치단체 간 사업협약 체결
-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 지원

* 사업기간은 자치단체가 2~5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평가) 매년 협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원

규모 결정 등 예산에 반영

* 평가결과 '미흡' 시 익년도 예산 최대 20% 삭감, '매우 미흡' 시 최대 30% 삭감,
2년 연속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시 지원 중단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과 기존 공모사업 비교>

구 분	기존 일자리 공모사업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군·구 등 자치단체별	지역 노동시장 권역별
지원 기간	단년도 위주	2~5년간(중장기)
심사 대상	단기 프로그램 사업 계획	중장기 지역 일자리 종합계획
중앙정부 역할	재정지원	재정 및 컨설팅 지원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일정(안) >

추진 단계	주요 내용	시기	주체
사업공고	• 대상요건, 지원내용(안) 등 사업 공고	'19.12월	고용부
공모·신청	• 사업계획(안) 수립·제출 - 「지역 단위 업종별 일자리 네트워크」 의견 수렴 및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출	'20.2월	자치단체
심사·선정	• 1·2차 심사 후 가선정	'20.2월	사업수행기관 심사평가위
컨설팅	• 사업계획 컨설팅 후 내용 확정	'20.3월	상동
협약 체결	• 확정된 내용으로 고용부-자치단체 협약 체결	'20.3월	고용부 자치단체
사업추진	• 당해연도 사업 추진	'20.3월~	자치단체
사업평가	• 당해연도 사업 추진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20.12월	심사평가위 고용부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벽지로 찾아갑니다

- 도서벽지 거주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특별 실시 -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과 함께 9월 20일(금)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를 시작으로 도서벽지 거주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지자체,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 기반 시설과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의 기회가 적고 복지 지원이 취약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전체 행정구역 내 도서벽지 비중이 높아 폭력예방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남 지역에서 우선 실시되는데, 특히 전남 지역에는 약 6천여 명의 결혼이주 여성이 거주하고 있다.
- 여성가족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폭력 피해 신고·상담 방법에 관한 정보는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관계망을 넓힐 수 있도록 주민 교류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방법은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춰 강의와 연극을 연계한 교육 방식을 도입하거나 통역보조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 경찰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지역 보건소의 출장검진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20명 이상의 개인이나 단체가 희망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나 지역 공동체는 ‘예방교육 통합관리 누리집 (홈페이지, shp.mogef.go.kr)’ 또는 ‘대표 전화(1661-6005)’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와 시의성 있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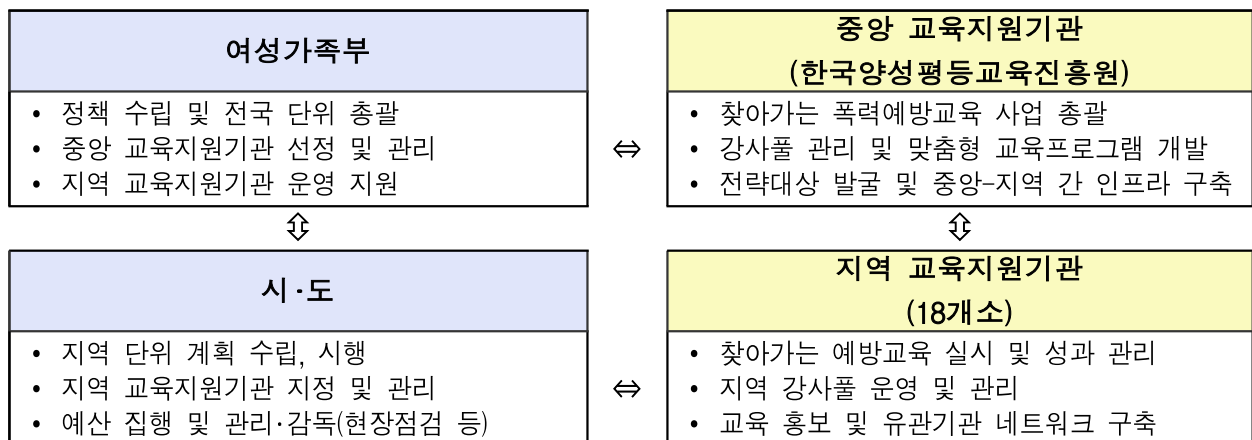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일상에서의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개요

2.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방법. 끝.

□ 추진개요

- (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 대상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추진을 통한 폭력예방 사각지대 해소 및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도모
-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대상) 폭력예방교육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일반국민*
 - * 폭력예방교육 비의무 대상 일반국민 대상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폭력 예방 파수꾼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지역 사회 성원이나 예방교육 기회와 접근성에 한계가 있던 취약계층 우선 지원 등을 통한 교육대상 발굴 확대
- (추진체계) 전국 17개 시·도와 공동으로 추진



□ 추진실적

(단위 : 명)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참여인원	1,204	2,604	3,851	3,903	5,458	5,363

□ 주요내용

- (교육내용) 강사에 의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지원(각 1시간)
- (교육장소) 교육신청 단체에서 교육장 제공
 - * 자체적으로 교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으로 장소 연계
- (신청절차) 20명 이상, 교육 일정 14일 전까지 신청
 - *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으로 신청(대표전화 1661-6006) 및 온라인 신청(shp.mogef.go.kr)

□ 전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대표전화 1661-6005]

- 중앙 교육지원기관(1개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지역 교육지원기관(18개소)

구분	지역 교육지원기관	구분	지역 교육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북부	에코젠더
부산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강원도	속초여성인권센터 속초성폭력상담소
대구시	대구여성가족재단	충청북도	충북 청소년성문화센터
인천시	(사)해피패밀리 인천남지부 인천폭력예방교육전문기관 하모니	충청남도	천안YWCA
광주시	광주여성재단	전라북도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대전시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전남여성플라자
울산시	울산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경상북도	경상북도 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세종시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경상남도	좋은삶가족복지상담연구소 부설 경남성교육센터
경기남부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제주시	제주YWCA 통합상담소

□ 온라인 신청 방법 : 상시 접수 (교육 실시 최소 14일 전 신청/조기 마감 가능)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shp.mogef.go.kr) 접속

- 1) '일반국민 교육지원' → '신청안내' → '폭력예방교육 신청하러 가기' 배너 클릭, 신청양식 작성 후 제출
- 2) 신청 후 '교육신청 결과 확인하러 가기' 버튼 클릭, 교육신청 결과 확인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신청자 성함과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버튼 클릭

일반국민 교육 지원

신청안내

2019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신청 안내

→ 교육대상 : 일반국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

- 도서벽지, 농산어촌 주민 등 교육 접근성이 제한적인 대상 우선지원
- 민간기업 종사자, 소상공인, 지역주민, 학부모 등 폭력예방 인권파수꾼 역할이 기대되는 대상 (안전파수꾼이랑) '가장 일찍부터 가장 늦게까지' 생활현장에서 일반 시민과 직접 만나고 있어 지역의 폭력예방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 성원(직업군)

→ 교육방법 :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 무료 지원 (1시간/전문강사 파견)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으로 무료지원에서 제외

→ 교육인원 : 20명 이상 ~ 100명 이하

→ 신청방법 : 전국 교육지원기관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신청(교육 14일 전)

폭력예방교육 신청하러 가기
찾아가는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

교육신청 결과 확인하러 가기
신청확신 교육진행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무료지원 사업은 신청수요에 따라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2019년 교육 목표 횟수 총 5,150회)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 ... 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 운전자에게 보행자·도로작업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제공 ... 27일 시범운영 -

-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접근차량의 정보를 받고 운전자는 도로작업자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받게 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로 위 사망자의 40%에 이르는 보행자 및 도로작업자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 작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삼성전자와 협업하여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이하 C-ITS)를 활용한 보행자 안전서비스와 스마트폰 연결 단말기**를 개발했다.
-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ITS에 양방향 통신을 접목하여 교통사고 예방,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 ** 휴대폰케이스·거치대에 C-ITS 통신 기능을 탑재하여 스마트폰, 노변기지국과 연결
- 보행자 안전서비스는 신호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교통 혼잡지역이나 도로 위 공사구간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 운전자는 통신을 통해 시야에서 벗어나거나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 정보 또는 고속도로·국도 등에서 공사 중인 도로작업자 위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행자도 접근하는 차량정보를 받을 수 있다.

- 세종 지역 내 조성된 개방형 전용시험장(한누리대로 외 3개구간, 16.6km)을 활용하여 개발된 서비스를 시범운영.고도화*하고, 향후 도입방안을 검토하여 지자체 C-ITS 실증사업** 등에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UI/UX 개선 등 소비자 수용성 제고, 신규서비스 개발 등

** 서울·제주·광주·울산에서 C-ITS 서비스 실증 및 지역특화서비스 개발 중('18~'21)

《 주요 서비스 및 시연영상 》

서비스	개념도	시연영상
보행자충돌방지 경고서비스		
도로작업자 알림서비스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이창기 과장은 “차량과 다른 차량 및 기반시설 간의 안전서비스 중심이던 C-ITS의 서비스 범위가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들까지 대폭 확대되는 계기로 기대한다.”면서,

-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효과가 높아지는 C-ITS의 특성상, 이용률 94%인 스마트폰과의 연계는 향후 보행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소지한 운전자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양영토 주권 강화 위해 해수부-해군-해경 손 잡아

- 9. 10. '범해양기관 협력체제 구축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6일(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부산경제진흥원과 벡스코가 후원한다.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는 구직자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기업 홍보와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양수산 분야 최대 규모의 일자리 관련 행사이다.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는 104개 해양수산 관련 기업·기관이 참여하며,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15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작년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자 123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개막식은 오전 11시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입구에서 열리며,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박진석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물류국장, 최종열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등을 비롯한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참여기업 대표, 취업을 원하는 대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취업박람회에서는 기업별 채용기준에 따라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를, 구직자에게는 합격률이 높은 기업을 사전에 추천하는

‘스마트 매칭*’을 실시하고, 기업별·시간별 면접 진행상황을 한눈에 보여주는 ‘면접현황판’을 설치하여 구직자의 면접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수요자 편의적으로 운영된다.

* 기업별 채용 기준(항목별 배점 등)과 구직자 이력서상 정보를 분석하여 각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자동으로 추천하는 프로그램

또한, ▲구인기업·기관의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현장 면접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는 ‘채용관’, ▲ 주요 기업·기관별 채용설명회, 창업경진대회, 국민참여 정책제안대회 등이 개최되는 ‘채용설명관’ 등이 운영된다. 채용설명관에서는 ‘물을 타고 돈이 흐른다’라는 주제로 조승연 작가의 특강도 진행된다.

이 외에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직업기초능력 검사, 입사지원 컨설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분석, 직업 심리검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면접교육,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행사들이 함께 열릴 예정이다.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은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며, “이번 취업박람회가 많은 구직자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02-6925-1242)과 공식 누리집(www.oceanjob.or.kr)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2019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요>

- 일시/장소: 9. 26.(목) 10:00~17:00 /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4홀
- 주최/주관: 해양수산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전문인력 네트워크사업단
- 행사규모: 해양수산 유관 기업·기관 104개사, 참관객 약 2,000명
- 주요내용: 채용관 및 채용설명관 운영, 직업심리검사 등 부대행사 개최

□ 행사 개요

- (일시) 2019. 9. 26.(목) 10:00~17:00
- (장소)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Hall 4(A, B, C홀)
- (슬로건) “일자리의 바다”
- (주최/주관) 해수부, 부산시, 부산테크노파크, 중앙대학교 국제물류 전문인력 네트워크사업단
- (행사규모) 해양수산 유관 기업·단체 104개사, 참관객 약 2,000명
- (주요내용) 기업 채용관, 채용 설명관, 각종 부대행사 등

- △ (채용관) 100개 기업·단체별 부스에서 구직자 면접·상담 진행
- △ (채용 설명관) 명사(조승연 작가) 특강, 취업 특강, 기업별 설명회, 일자리 정책 국민제안, 창업경진대회 등
- △ (부대행사) NSC 검사, 입사지원서 컨설팅, AI 자기소개서 분석, 직업심리 검사, VR 면접교육, 면접 메이크업, 이력서 사진촬영 등

□ 개막식 개요

- (시간/장소) 11:00~11:30 / 행사장(Hall 4) 입구 등
- (내용) 박람회 현황 소개, 테이프 커팅, 박람회장 순람 등
- (주요 참석자) 해수부 차관, 부산시 해양수산물류국장,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등 관계기관, 참가기업 대표, 구직자 대표(해양대, 중앙대) 등

< 개막식 세부일정 >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0:02	박람회 현황 소개 및 개식 선언	사회자
11:02~11:05	주요 참석자 소개	”
11:05~11:10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11:10~11:30	박람회장 순람	

구 분	명 칭
정부, 공공기관 (26개)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해양조사원, 해군 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육군본부 53보병사단, 국립해양박물관, 극지연구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기업, 협회 (78개)	현대상선, 동원산업(주), 흥아해운, 사조산업, 한국해운조합, SH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 관세법인 에스에이엠씨, 다이나믹큐, (주)토탈소프트뱅크, 브링케이, 제주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유)이비전, 해양조사발전협의회, (주)금아물류, 주식회사 팀프레시, (주)바른씨, 디와이디해운항공(주), (주)아이엠에이해운항공, 포스에스엠,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주), 한보에이전시(주), 티케이쇼핑주식회사, 인터렉스메가라인, (주)한타특수운송, 주식회사 동해물류, 장금상선 주식회사, (주)153로지스틱스, (주)스마트로지스틱, (주)지아이지, (주)팩스타, (주)휴먼코퍼레이션, 패밀리익스프레스글로벌, 바른로지스틱스 주식회사, 범양해운 주식회사, 두손컴퍼니, (유)해진해운, (사)한국선급, 엠티에스글로벌, 한일후지코리아(주), (주)디이엑스, (주)뉴신영, (주)테크로스, (주)라스텍, (주)바다중공업, 에스엔엘산업(주), (주)에메스라인, 서한이엔피, 정일산업주식회사, 제이수산 주식회사, 세화씨푸드, (주)서울식품, (주)아이렉스, (주)에스티, (주)늘푸른바다, (주)청해에스엔디, 영어조합법인 그린수산, 수협중앙회 어업인일자리지원센터, 현대해양서비스, (주)무빙보트, 오션테크(주), 한국엔드레스하우저(주), (주)디노베이션, 하이에어코리아(주), (주)씨텍, (주)아쿠아드론, 한국컴포짓(주), (주)네오엔비즈, 주식회사 진아, (주)아이렘기술개발, 새만금유람선(주), 에스텍마린(주), (주)조이, (주)익스트림스포츠킨코리아, 젯시티, 국토해양환경기술단

